



이달부터 달라진 전력산업계 제도

민간발전사업자 전기 공급 구역전기사업 첫 도입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전기 직판 허용



에는 한전이 독점하던 전
기 공급을 민간 발전사업
자도 할 수 있게 되며, 소
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전과 직접 전력
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
정됐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발
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올 하반기 전기전력계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 내용을 정리했다.

민간 발전사업자 전기 직판 허용

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 특정 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이달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대도시 도심과 재개발 지역, 주상복합건물, 대형 위락시설 등 전기수요 밀집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 기존 한전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 한전 직판 허용

설비용량 200㎾ 이하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한전에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력량계 설치비와 전력거래소 연회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 밖에 정부는 주유소 등 석유제품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 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그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과 석유공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전기안전점검 다중시설 확대

사업개시 전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숙박업소, 목욕장,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8종의 업소가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방, 노래

방,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보육시설, 유치원, 공연장, 영화관, 백화점, 할인점, 종합병원, 호텔 등만이 전기안전의무 점검 대상이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이달부터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자유지역이 통합되고 외국인투자환경도 대폭 개선됐다. 통합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물류업은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유지나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로 50년간의 장기임대를 허용,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입주 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기 위해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된다.

| 전기제설 편집실 |